

13억 임금 밀리고 SNS 호화생활...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지도
청산노력·상습체불 사업주 엄정 수사
지방노동청, 현장 찾아 지도하기도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5일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1억 2000만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방문해 당일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9억50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여수지청장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다.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지난 9일 체불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약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 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임금체불 13억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돼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른 특별근로감독대상인 광주의 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청산 노력과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했다.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현 기자 kdh@metroseoul.co.kr

한수원

신한울3,4호기 건설 착수

신한울3,4호기가 건설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고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시작에 앞서 13일 신한울3,4호기 건설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명품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신한울3,4호기는 국내에 7,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kW(킬로와트)급 신형 원전(APR1400) 노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변경 협의' 거래조건 변경시 준수 절차 등 규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

가 도입됐고, 이는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신규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인상',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구입강제품목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축소', '구입강제품목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열거

해 어떠한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고,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한울3,4호기 건설공사 부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부

韓, 첫 세계표준포럼 유치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내년 첫 개최하는 기업인 중심 세계표준포럼이 한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3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내년 12월 개최되는 '제1회 세계표준포럼(World Standards Forum)'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ISO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함께 기업 중심의 세계표준포럼 출범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개최장소를 확정하고 참석대상, 주요 일정 등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세계표준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ISO 회장인 조성환 회장(현대모비스 고문)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표준 사용자인 세계적 기업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차세대 표준포럼을 3대 국제표준기구 협의체인 세계표준화협의체(WSC)에 제안해 출범하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친환경차·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부, '韓-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 기로 했다.

한국과 필리핀이 친환경차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경협위)'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겐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2023년 9월 서명)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

기로 했다. 또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도체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

산업부, 삼성전자 등 업무협약

반도체산업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판교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SiH4,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실리콘 절연막 등 형성시 사용)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산업부는 그간

업계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 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